

토론문

차병학 브이피피랩 대표이사

정부 주도 신사업 정책·제도의 산업 생태계 조성

□ 정부 주도 신사업 정책·제도에 대한 공통질문

- 다각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 주도 신사업 정책·제도는 현장에서 적기에 시행될 수 있는 구조인가?
- 개별 부처·기관별로 추진되는 지원사업, 시장제도, 기술기준 등의 정책이 상호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는가?
- 기술을 보유한 에너지 스타트업이 초기 시장 형성 과정에서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가?
- 지역 내 전문인재 양성과 신사업 추진이 연계되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확장될 수 있는가?
- 정부 지원사업이 단기 보급 중심을 넘어, 민간기업의 사업화·투자·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가?

□ 정부 주도 신사업 정책·제도의 최우선 현안사항

○ 신사업 정책·제도의 적기 시행 및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

- 정부 주도 신사업은 초기 시장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, 제도 시행 시점과 세부 운영방식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
- 그러나, 정책·제도의 추진 일정이 불명확하거나 관계기관 간 역할이 분산될 경우, 민간기업은 설비투자, 사업모델 수립, 인력확보에 어려움 존재

⇒ 정부 주도 신사업 정책·제도의 시행 일정, 참여요건, 운영기준을 조속히 구체화하고, 민간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체계 마련 필요

○ 기술보유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 마련 필요

- 전력신사업 분야는 기술력과 운영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참여가 시장 혁신과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

- 초기 시장에서 신용도, 자본력, 보증요건 등이 주요 평가요소로 작용하면서 기술보유 스타트업의 참여가 제한될 우려 존재
 - 스타트업이 단순 참여기업에 머무르지 않고, 실제 사업운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·재정적 기반 마련 필요
- ⇒ 기술력 중심의 평가체계, 기업 규모별 차등 지원, 보증·자금조달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 확보 필요

○ 지역 전문인재 양성과 연계한 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

- 정부 주도 신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지역 내 전문인력 양성, 기업 성장, 사업운영 경험 축적 필요
- 에너지 신사업은 현장 운영, 데이터 분석, 전력시장 대응 등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지역 기반 인재 확보가 필수적
- 지역 기업과 전문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신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동시 확보 가능

⇒ 신사업 추진과 지역 전문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연계하고, 지역 내 기업·공공기관 협력의 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

□ 결론

- 정부 주도 신사업 정책·제도는 단순한 보급사업 또는 일회성 제도가 아닌 향후 산업 구조와 시장 생태계를 형성하는 핵심 기반
 - 따라서, 정책·제도의 적기 시행과 함께, 민간기업이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제도 운영체계 마련 선행 필요
 - 특히,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초기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와 역량을 고려한 참여기준 및 지원체계 필요
 - 또한, 지역 전문인재 양성과 신사업 추진을 연계하여 정부 정책이 에너지 유니콘기업 양성, 지역 일자리 창출, 산업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 필요
- ⇒ 정부 주도 전력신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정책·제도의 적기 시행, 기술보유 에너지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 마련, 지역 전문인재 양성과 연계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,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전력신사업 기반을 구축